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

2005.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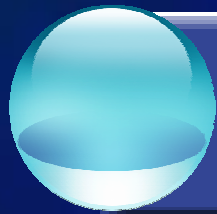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보고 순서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



부품·소재 산업 발전 전략

7.7 종합대책 실시간 관리시스템 시연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

보고 배경



7.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유형별·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체질강화 기본방안

종합대책 이후

- IMF권고, 경제양극화 대응방안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 중소기업 1만개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를 보완하고
- 1.13 연두회견에서 중소기업을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원방식을 바꾸어 가겠다고 밝히신 내용을 반영

오늘 중기특위

- 중소기업 정책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확정



I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 7,581개 제조업체 / 5,065개 서비스업체
- 조사기간 : '04.10.7~11.15

경쟁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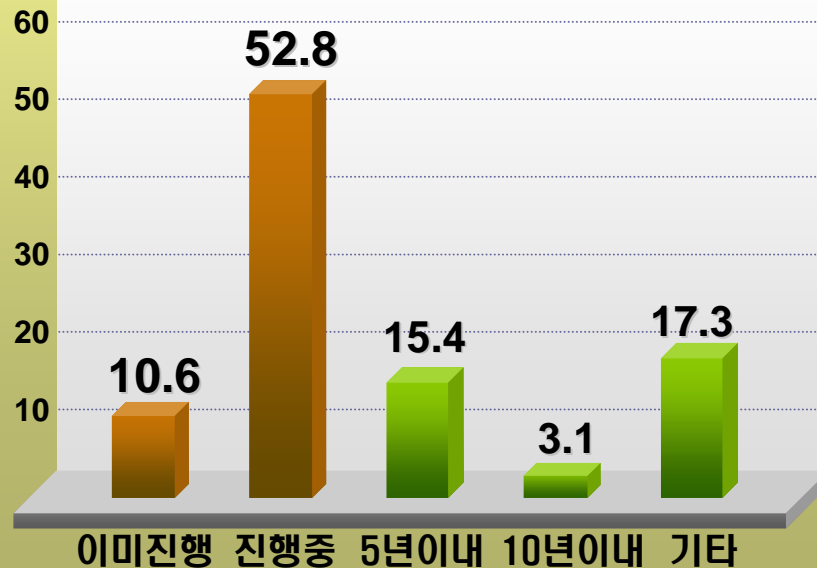
대다수기업 (63%)

● 주력상품이 이미 축소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



● 지속 성장의 한계

중소기업 주력상품의 시장 축소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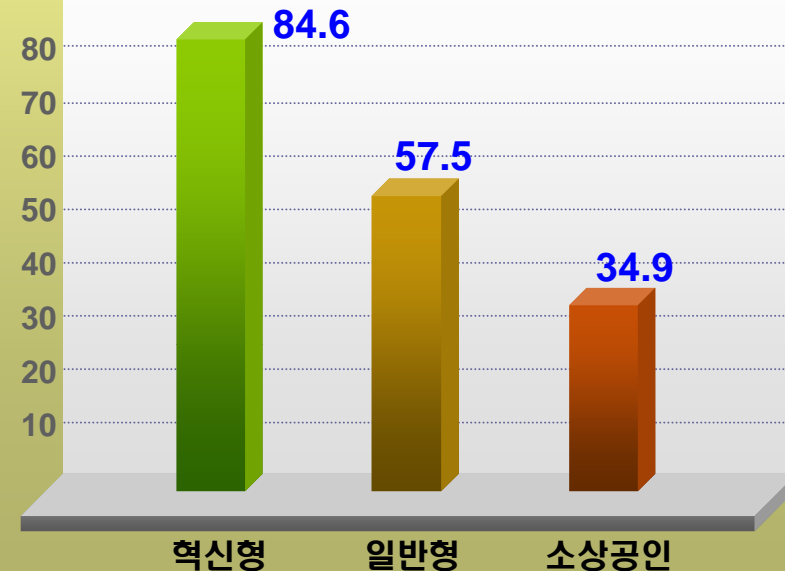
혁신형 중소기업

● 차기 상품 준비 (84.6%)



● 시장변화에 적기대응

차기 상품 보유 현황(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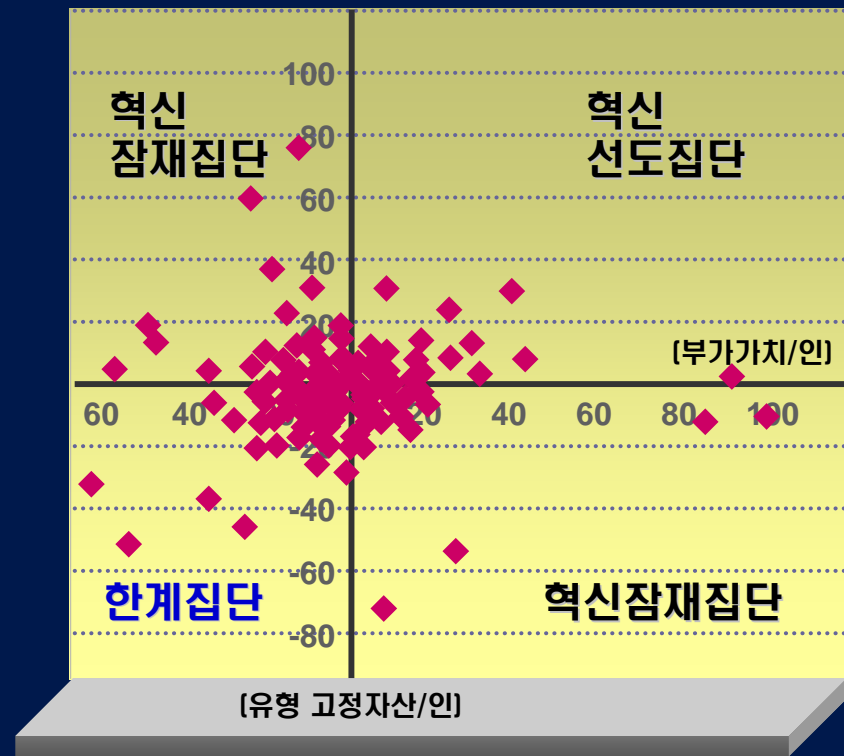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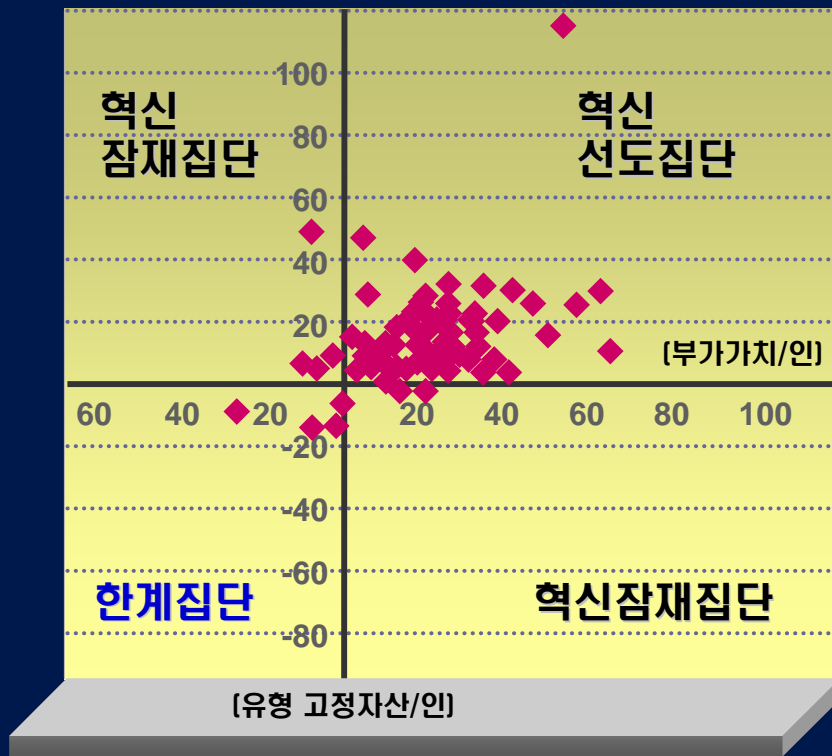


경쟁력 실태



외환위기 이후 한계기업 확대 → 양극화 심화

('91~'97) 0.9% → ('00~'03) 15.3%



성장단계별 실태



창업·벤처 단계

- 신제품 판로개척 어려움으로 매출부진 (37.1%)
- 투자시장 미성숙으로 자금조달 애로 (25.7%)

성장 단계

- 지속성장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애로 (42.4%)

구조조정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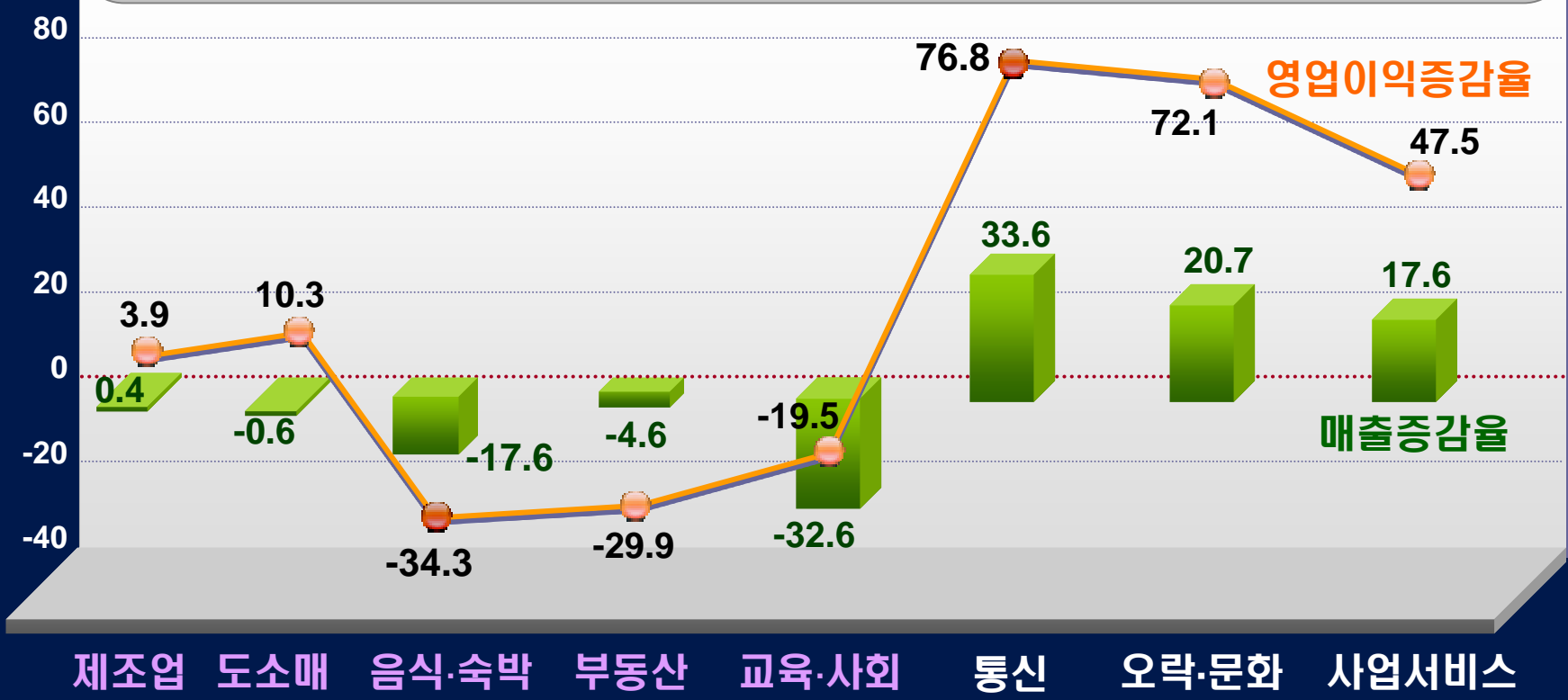
- 주력 상품의 시장 위축에 직면 (78.5%)
- 업종 전환 및 구조조정 지연 (28.9%)

업종별 실태



- 통신, 오락·문화 및 사업서비스업의 매출·이익 ↑
-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의 매출·이익 ↓

업종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감현황



기업규모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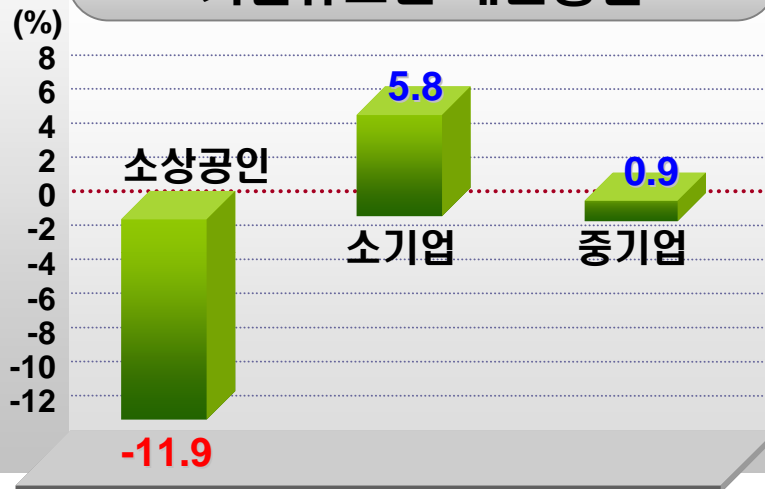
내수침체로 중소기업의 전반적 경영성과 ('04) 악화

매출액 : $\Delta 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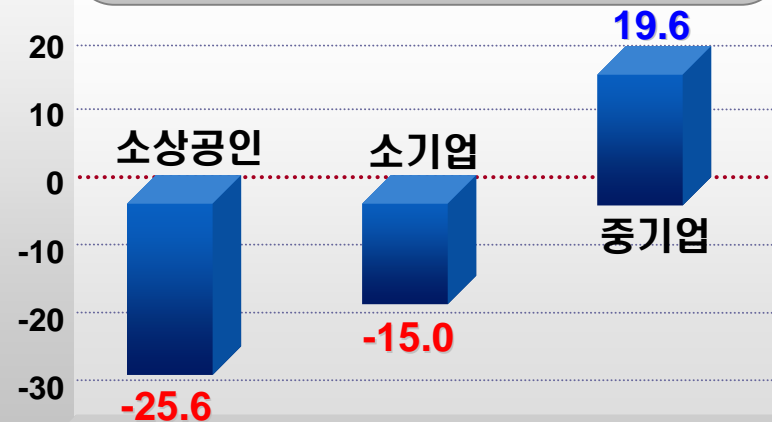
영업이익 : $\Delta 15.5\%$ ↓

내수의존도가 높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부진

기업규모별 매출증감



기업규모별 영업이익 증감



한·일 FTA 영향



- 부품·소재와 기계·전자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
- 중장기적 영향 : 긍정적(21.6%), 부정적(16.4%), 중립의견(61.9%)

대일경쟁력 70% 수준이하 업체 비율



실태조사 결과 종합



- 경쟁력 약화, 판로·자금·기술인력 확보 애로, 구조조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 여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유도

■ 중소기업정책 기본방향

- 보호·육성 위주
- 직접지원 위주
- 공급자 주도형
- 내수 의존형



- 자율·경쟁 촉진
-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
- 수요자 맞춤형
- 국제화 지향

■ 중소기업 육성전략

- 소상공인·소기업 등 기업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 참고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혁신형 기업
295만개	262만개	24만개	8만개	1 → 3만개
제조업 33만개	10인 미만 27.3	10~49인 5	50~300인 0.5	0.7 → 2만개
서비스업 등 262만개	5인 미만 234.3	5~9인 19	10~200인 7.5	0.3 → 1만개

■ 중소기업 지원관련 기관 총력지원체제 확립 (행정기관 37개 2,794명) 참고

- 지역별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
-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중기특위 개최 확대 (대구, 광주 기개최)
 → 중소기업의 정책체감도와 정책인지도 제고

중소기업정책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12개)



성장단계별

벤처 기업 활성화

원활한 구조조정

업종별

부품·소재 기업 육성

유통 등 서비스분야 육성

기업규모별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경쟁여건

획기적 규제혁신, FTA 중기대책

인프라

금융 시스템

기술 인력

시장 창출

시책 정비



Ⅱ 중소기업 정책과제 (12개)

과제1 벤처기업의 활성화



종합 대책 주요내용 ('04.12 경제장관간담회 확정·시행)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원 확충

- 투자펀드(1조 4천억원), 채권 보증(3년간 10조원),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 비율확대로 투자확대 유도

■ 패자 부활 프로그램 도입



■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

- 일일 가격변동폭 확대, 등록후 매각제한기간 단축(2년→1년)

■ 비상장기업의 법인세 과세이연 등 개편

- 제3시장 참여기업확대,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책에 따른 여론

- **언론** : 벤처업계 회생의 발판을 마련
발목 잡힌 경제에 활력을 부여
- **업계** : 지원대책 환영, 내실 다지기 다짐
 - 고용확대 : 이공계 미취업자 5천명 채용('05)
 - 벤처문화재단설립(100억원), 새싹벤처 지원
 -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100개 육성(~'08)

“가자, 벤처로”
 新정책 힘입어 자금유입 기대감 고조
 창업 열기속 신기술 개발도 점점 활기

일부자 고정세 시장은 올
 펀드의 P/E 비율이 리서치
 벤처창업이 활기를 띠고,
 중소벤처기업도 풍부한 자금
 으로 신기술 개발에 나서는
 4. 첫단추가 꿰어질 것으로 기
 고 말했다.
 IT투자 정현실 이사는 “중기
 2조원은 1조원 규모의 모태펀
 1. 추가로 정부 재정 5000억원
 1. 벤처 부문에 투입될 것이라
 여가기 풀면서 민간 투자도 급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 7.1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반응

- **벤처대책, 대통령님의 중소기업육성 메시지**
- **투자시장의 회복추세**
* 코스닥 지수의 지속 상승 등 투자분위기 확산

불붙은 코스닥 400 돌파
 벤처 붐등 기대 7개월만에 재탈환...6일새 10% 상승

강력한 정책 의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중소·벤처기업
 활력 회복의 계기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정책적 차별성 보다는 저금리 지원에 중점

- 중견기업 위주의 수혜
- 기업의 신용수준과 무관한 획일적 정책 금리 적용
 - * 구조개선자금 : 4.9%, 수출금융 : 5.1%, 관광숙박시설 : 3.5%

■ 일방적 시혜차원의 과도한 공적 신용공급 (IMF 정책권고) 참고

- 공적 신용보증에 대한 과다수요 유발
 - *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 부담률 : 85 %
- 민간 보증시장에 대한 구축효과 초래

■ 정책자금 운용기관간 효율적 연계체제 미비

- 유사 중복 지원, 사후관리 미흡 등

주요 대책

■ 정책자금의 역할 재정립 ('05.3)

- 창업·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등에 집중지원
단순 운전자금은 취약 계층(소기업, 소상공인)에 중점 지원
- 성장 가능성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공급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

- 투·융자를 통한 창업초기 기업 집중 지원

일반형 중소기업

- 민간금융을 활용토록 유도 (장기시설투자는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

- 사업성 및 신용도에 따라 지원금리 차등화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등 우대방안 추진 ('05.3) 참고

주요 대책

■ 일반 보증은 상업적 베이스로 전환 ('05.9)

- 중소기업의 신용정도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차등화와 수지균형 도모
- 기술 보증 및 소기업보증 등 정책목적의 특별보증에 한해 손실보전

- 신용보증기금 → 일반형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전담
- 기술신용보증기금 → 혁신형기업 전담 보증지원기관으로 육성

- RIS 참여기업에 기술평가를 통한 특례보증 지원 ('05.6)

■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절차의 대폭 간소화

-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
 - ('03) 26% → ('05) 50% → ('07) 70%
- 중진공, 보증기관, 은행간 금융거래 One-Process 공급체계 구축 참고

주요 대책

■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유인제도의 개선

- 은행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를 확대 반영
- 총액한도 대출 지원방식을 보완 개선 ('05.3)
 - 네트워크론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 ('05.3)

■ 각 부처에서 운영되는 정책자금정보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한 정책자금 연계시스템 구축완료 (금년중)
- 정책자금운용기관-기업신용정보회사(CB)-금융기관간 정보공유로 사후관리 기능 강화

필요한 곳에 물이 스며들듯 효율적인 자금지원 체계 완성

과제3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 산자부 장관 별도 보고 〉

과제4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내수침체와 유통구조 변화로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 '03년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체중 1년후 휴폐업률 : 18.6%

■ 대형 할인점 증가에 따른 재래시장 상권 위축 가속화 참고

- 대형할인점 증가추세 : ('00년) 164개, 매출 11조원
→ ('04년) 268개, 매출 21조원

■ 원활한 정책지원에 한계 노정

- 소상공인 수의 방대(262만개)와 업종의 다양성
 - * 상당수가 생계형 자영업자로 빈번한 휴·폐업과 재창업 반복
- 종사자의 기술·기능 부족과 높은 연령
 - * 재래시장 상인의 69.2%가 50대 이상

주요 대책

■ 컨설팅, 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성공률 제고

- 상권정보(지역, 업종별) 체제 구축 및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 개발('05.6)
➔ 과잉진입 사전 예방, 자금지원시 사업성 평가 강화 등 참고
- 창업교육(실무 2개월 + 현장 1개월)과 자금지원을 연계 참고
➔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창업토록 유도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시·군단위의 『종합컨설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소상공인 정보화 촉진으로 비용절감, 경영효율 증대

- '04년 : 37만개 ➔ '08년 : 100만개

주요 대책

■ 1만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05.3)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억원 지원

■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가능한 업종으로 전환 촉진

- 상권분석 정보를 활용, 전직교육 및 컨설팅 강화 (연 2만명)
- 업종 전환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

■ 잠재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지원 ('05.5)

- 은행 및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저리로 점포 대여 (2,000억원)
 -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임차 점포 제공 및 업종선정, 경영지원 등 조기자활 지원

주요 대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상권 활성화 가능성에 따라 시장 특성별 지원
 - 지역특화시장 및 도심권 등 경쟁력 확보가능 시장 : 시설개선, 경영현대화 집중 지원
- 대형할인점 등과 경쟁이 곤란한 시장 : 용도전환 및 재개발 추진
- 재래시장 종합지원을 위한 경영지원센터 설립('05.3)
 - 온라인 점포 8천개 설치('05), 신용카드 단말기 등 지원 참고
- 공동물류, 저온창고 및 쓰레기 공동처리시설, 포장용기 공동개발 지원

소상공인 과당경쟁 지양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 비중 : ('04) 89% → ('07) 87%

과제5 원할한 구조조정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업종의 창업이 급격히 증가

● 개인서비스업체수 : ('97) 223만개 → ('03) 244만개

■ 기술진보·글로벌 경쟁·중국경제 부상 등으로 경제환경 급변

➔ 적응력이 취약한 상당수의 중소기업(28.9%)은 업종전환·퇴출 희망

● 업종전환·퇴출 희망 비율은 도소매업, 중개업, 운수업 등 생계형 업종에서 높고, 종업원수·매출액 등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

■ 상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원할한 사업전환 및 퇴출지원 체제 미흡

➔ 특히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체제 부재

주요 대책

■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 및 M&A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 벤처캐피털의 구조조정 투자시 일시적 경영지배 허용
- 신·기보 구상채권의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시장 매각 유도

■ 소상공인 등 한계기업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05.6)

- 시장전망, 경쟁력조사 등 유망업종·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업전환시 기업진단, 컨설팅, 자금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자산매각·취득 등 사업전환 활동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 한계기업의 해외진출시 현지 정착지원

- KOTRA, i-PARK 등 해외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정보 제공 등



현황 및 문제점

■ 연간 기술인력 공급규모 : 24만명 (중소제조업 기술인력의 28%)

- 공고 7만명, 전문대 8만명, 4년제 공대 9만명 등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공급자원은 풍부

참고

■ 중소기업의 33%는 기술인력 부족에 직면 : 부족률 6.4%, 5.8만명

- 근무조건 열악, 대기업·서비스업 선호 등으로 중소기업 근무기피
- 실업계 고교의 위축 및 졸업생의 대학진학 급증
 - * 실업계 고교 비중 감소 : ('00) 39% ➡ ('04) 35%
 - * 실업계 고교 대학진학률 : ('95) 19% ➡ ('01) 45% ➡ ('04) 62%

■ 향후 기술인력 부족은 지속될 전망 (부족률 6~7%, KIET조사)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대책

목 표

- 5년내 기술인력의 부족문제를 50% 해소
 - 총 3만명 양성(공고생 2만명, 대학생 1만명)
 - 기술인력 부족률 : ('04) 6.4% ➡ ('09) 3%

참고

추진전략

- 공고 및 산업대·공과대학을 지역내 기술인력 공급의 산실로 육성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 및 인력공급의 선순환 구조 확립

공 고

중소기업

대학진학

중소기업 복귀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 지원

-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근무가 가능토록 학부모·학교·기업간 『취업협약』 체결 및 맞춤형 기업현장교육 실시

공고생 (3학년)

-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 지급
- 중소기업 2년 근무기간, 입영연기
- 대학진학시, 대학등록금의 일부 지원

학 교

- 자율학교로 지정, 학교운영의 자율권 부여
- 교재개발비 및 실습기자재 지원
- 공고 교사의 전문교육 무료 실시(산업기술대)

- 상반기중 지역별 실태조사후, 전국 16개 공고를 시범운영

- '06년부터 전국 공고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

5년간 2만명의 기능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인력 지원체계 구축

■ 대학의 교수연구실·실습실을 특화된 전문기술 인력양성의 산실(산학협력실)로 활용

- 중소기업, 교수 및 재학생이 1~2년간 기술개발 공동수행
- 졸업후 해당기업 취업 및 연구성과 이전 ➡ 인력, 기술 동시해결

■ 연간 5,000만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을 산학협력실에 지원

- ('05) 200개 ➡ ('09) 600개, 총 2,000개 지원
-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관련 자금을 활용

■ 산업대(18개), 산학협력중심대(13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 향후 산학협력실을 산학협력연구소 형태로 운영

5년간 1만명의 특화된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

재교육 등을 통한 기존인력 활용 확대

■ 지역별 『인력구조 고도화 기획단』 구성 및 훈련프로그램 실시

- 사업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이동식 직업훈련서비스』 실시
- 온라인 기술교육 확대 및 개인별 교육훈련 자가진단시스템 보급

■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부담의 훈련비용 전액을 소득공제
- 단기해외 훈련비 및 대학등록금의 일부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및 자녀보육 지원

- 국민주택 특별 분양 확대 : ('04) 500 호 → ('05목표) 1,700 호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
- 자녀 보육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과제7 유통 등 서비스분야 육성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 산업의 발전 지연 → 고용창출, 성장 기여도 저조

-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음

미 국	일 본	한 국
77% [13%]	69% [11%]	54% [6%]

• 서비스산업 생산/GDP
(비즈니스서비스/서비스산업)

IT 강국에 걸맞는 IT 기술활용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도 미약

- 국내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약 7,000억불)의 0.9% 수준에 불과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과점

- 컨설팅업의 경우 맥킨지 등 외국계 회사가 시장규모의 50% 이상 점유
- S/W, 디지털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스타기업 부재

주요 대책

■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표준산업 분류 정비 및 서비스분야 표준화 확대
-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금융 및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선

■ 제조기업과 관련서비스 기업군의 통합적 연계생산체제 구축

■ 디자인·컨텐츠·IT기반 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 육성

- 대형화를 위한 중소기업 범위 상향조정
- 문화컨텐츠 수출정보시스템(CEIS) 운영 활성화 참고

■ 유통·문화·건설·IT 등 업종별 생태분석 → 특화지원

〈 차기 중기특위에서 업종별로 순차 보고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 GDP : ('03) 3.7% → ('07) 4.7%



현황 및 문제점

■ 시장개척능력 부족으로 OEM 방식 판매에 의존

- 일반시장 판매비중: ('01)18.3% → ('03)14.3%, 협력업체 비중 : 64%

■ 중소기업의 수출경험 부족 및 의지 미약

- 1년이내 수출실적 있는 중소기업체 : 10.6% 불과
- 수출의지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체 : 49.8%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미흡

- 품질 신뢰성부족, 보수적 구매관행 등으로 신기술제품 구매 기피
 - * 총구매액 중 신기술제품 구매비중 : 0.06% 불과 (19개 기관 조사결과)
- 중소기업제품 구매여부 판단기준 모호 및 점검체제 미비

주요 대책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 제정
- 소액 구매시(2억원 이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

■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강화

- 구매의무 대상기관을 지자체 등 151개 기관으로 확대
- 공공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확대 ('05년 100억원)
- '신기술제품 성능 보험제도' 도입

■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5.1조원, 70%)

■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전용 CATV 추진

- 시장정보 제공, 소상공인 경영교육, 판로개척 등

공공구매 규모 및 비율: ('04) 51.6조원, 63.4% ➡ ('07) 72조원, 70%

주요 대책

■ 해외진출 지원체제 강화로 수출개미군단 양성

- 해외유통시장, 국제조달시장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 해외시장 개척의 주된 애로는 정보부족 (38.6%)

- 수출인큐베이터(9개), 해외지원센터(38개) 등을 통한 현지 지원 참고 참고

- 전문업종중심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 ('05년 2000개 업체)

- 해외마케팅 지역전문가 양성

- * BRICs 등 신흥시장 무역전문가 양성과정 대학내 설치·운영

- 사이버 수출상담 활성화 → 창업초기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지원

- * 중소기업 10만개(5인 이상)가 평균 2백만불 수출시 연간 2천억불 수출 가능

중소기업 수출액·비중 : ('04) 985억불, 38.8% → ('07) 1,575억불, 45%

과제9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 측면

- 단기성과에 치중, 납품단가 인하 요구 빈발
-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에 신뢰부족

■ 중소기업 측면

- 기술혁신역량 미흡 : 기술의 85%가 2년내 모방 가능
-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 협력 파트너로서 지위 약화
*1개 대기업당 중소기업수 ('92) 72개 → ('02) 162개

■ 거래관계 측면

- 대·중소기업간 교섭력 차이 → 중소기업에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주요 대책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산 유도

-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보완 및 신규 제정(서비스업종) 참고
 - 사업상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등
- 전자입찰·경쟁입찰제 활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강화 : ('04년) 4만개 → ('07년) 7만개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발주 취소 등 애로분야 조사 중점 참고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설립·운영

- 대·중소기업 협력모델 발굴 및 협력사업 알선·지원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 대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지역 대·중소기업협력단』 구성 (대한상의)
 - 지방중소기업 컨설팅·교육지원

공정한 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동반발전

과제10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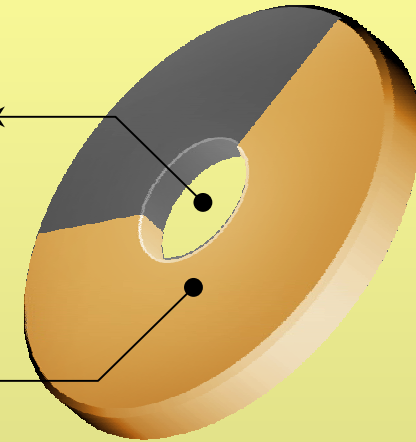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규제 개혁 위원회 등록규제 ('04.12현재) : 총 7,732건

- 중소기업 규제는 5,175건으로 총 규제의 67%를 차지
- 법령 이외 훈령, 예규 등에 근거를 두고 인·허가, 신고, 제출 등 규제가 광범위하고 다양

중소기업 관련규제
5,175건 (67%)

총 7,732건



■ 분야·단위규제별 개별 검토를 통한 규제개선으로는 실효성 한계

➔ 기존 규제개혁 틀을 넘는 혁신적 규제개혁 방안 필요

주요 대책

■ 우선, 계획입지내 중소 제조 및 서비스업체 규제자유화 시범 추진

- 필수 규제만 존치시키고, 여타 규제는 일괄 철폐 (네가티브 방식)
 - * 국민건강 보호, 산업재해·안전, 환경오염배출 기준 등
 - ** 대지안에 조경의무,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등
- 계획입지(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에 시범적용 후 점차 확대

■ 추진일정

- 부처별 필수 규제 조사중 ('05. 1)
- 민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개별규제별 타당성 검토 ('05. 3)
- 적용할 필수 규제항목 선정 ('05. 4)
- 총리실과 협조하여 규제개혁기획단내에 『중소기업규제개혁특별팀』을 구성하여 획기적인 시행방안 마련('05. 6)



현황 및 문제점

- 전세계적인 FTA확산으로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
 - FTA(WTO 통보) : 총 300건, 발효 150건 ('04.11)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FTA개념 및 효과에 대한 인식부족
 - 한·일 FTA 추진상황을 알고 있는 업체는 14.8%에 불과
- 단기적으로는 상대 국가에 따라 품목별로 부정적 영향 우려
 - 비교열위에 있는 첨단산업 품목(예: 한일FTA, 부품소재)의 경우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
 - * 미세한 가격경쟁 우위 소멸로 기술혁신 의욕 저하 우려

주요 대책

기본방향

- FTA에 능동대처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계기로 활용
 - * 외환위기 직후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시 오히려 상당수 품목이 경쟁력을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일관되게 추진
-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빈자리는 벤처·창업 활성화로 대처
- FTA에 따른 외국인 투자증대를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대로 연결

■ 우선, 부품·소재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

- 원천 기술 및 중소기업형 품목은 획기적 R&D 지원

■ 내수 위주 중소기업을 수출산업군으로 전환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협력지원센터 설치
- 글로벌 경쟁능력을 갖춘 수출기업 육성

■ 업종별 기술 격차와 상대국 특성을 반영한 FTA협상 전략 수립

- FTA 발효시기, 유예품목 및 유예기간 결정 등

■ FTA대상국과 사전 기술협력 확대

- 공동 기금 및 양국 중소기업 협력 위원회 설치 등

■ 신속한 구조전환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경쟁력 약화업종의 합리화 및 근로자 전직훈련 지원

■ FTA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 및 대응방안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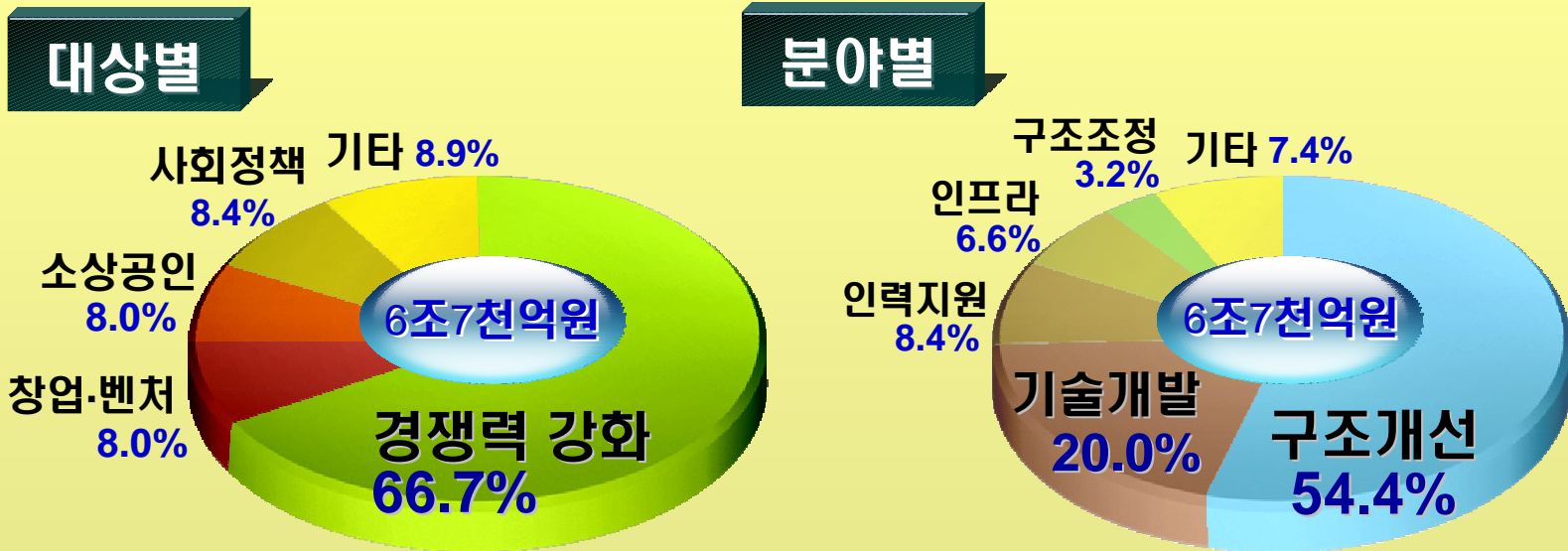
FTA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과제12 중소기업 지원 시책 정비



현황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234개 재정지원사업(14개 부처)으로 구성



형태별

- 정책자금용자 : 71%
- 정책자금(용자) 수혜업체 : 5만4천개 (전체중소기업의 1.8%)

참고

정비계획

정비방향

- 중소기업 정책혁신 방향에 맞추어 지원시책을
➔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로 전환
-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연계, 시책대상의 명확한 설정
➔ 시책의 실효성 제고

정비내용

- 경쟁력강화 분야 : 146개 사업중 26개 사업 참고
 - 사례1 : 환경 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사업 (250억원)
 - 지원대상이 환경설비 수요자, 공급자, 환경사업자로 포괄적
 - 일반기업 지원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동사업은 혁신선도 설비 생산업체에 집중지원하여 국제환경규제 대응력 제고

● 사례2 : 수출금융 지원사업 (650억원)

- 100인 이상 기업 지원(38%)에 비해 20인이하 영세기업 지원(29%) 미흡
- 시중은행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수출기업에 집중지원 되도록 보완

■ 창업·벤처 분야 : 26개 사업중 10개 사업

● 사례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 (200억원)

- 벤처기업 집적화를 통해 기술·정보교류 확산이 목적이나 집적도 미흡(20.5%)
- 수출·법률 등 경영자문과 연구개발·시험생산 등 기능 보강
- 테크노 파크 등 지원혁신 거점과 연계하여 혁신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

■ 소상공인 분야 : 재래시장 활성화 등 5개 사업

■ 유사·중복 사업 : 창업보육사업 등 53개 사업



- 오늘 보고드린 정책과제중 계속 보완·발전이 필요한 부문은 세부계획을 추가로 마련하여 차기 중기특위를 통해 보고
- 중소기업 정책 혁신을 위해 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총괄조정기능도 강화하여 정책이행도를 높여나가겠음
- 오늘 보고와 토론을 통해 확정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여 중소기업에 배포(유인물, 인터넷 등)하여 정책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음



중소기업 지원관련 기관 : 525개 38,369명

본문

■ 정부부처·청·지자체 : 37개 2,794명

- 중기특위,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16개 시·도 등

■ 유관기관 : 462개 31,753명

- 중진공, KOTRA, 신보, 기보, 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 소상공인지원센터, BI, 정보화경영원, 산업기술평가원, TTA,
- 디자인진흥원 등
- * 지원서비스 : 시장·산업정보, 자금·보증, 인력, 기술·인증·표준, 정보화, 공공구매, 수출·마케팅, 컨설팅, 창업보육 등

■ 민간단체 : 26개 3,822명

- 중기협중앙회, 벤처협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여경협, 컨설턴트협회 등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방안



<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 전망>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0,000	13,000	17,500	23,000	30,000
이노비즈	2,800	3,500	5,000	7,500	10,000
기타 벤처형	7,200	9,500	12,500	15,500	20,000
(제조업)	(7,000)	(9,000)	(12,000)	(15,500)	(20,000)
(서비스업)	(3,000)	(4,000)	(5,500)	(7,500)	(10,000)

■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창출

- Inno Biz 지원사업 확대(중기청) : R&D지원, 컨설팅, 보증지원 등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 IT839 전략 추진에 따른 IT분야 선도기술기업 창출(정통부)

■ 지식기반서비스(KBS)산업 창출

- 통신방송네트워크설계(NI), 전자정부·기업정보화·전자상거래 등(SI), IT기반 경영·기술·엔지니어링, 마케팅·디자인·기술평가·인력지원서비스 등

■ 제3시장 참여기업 확대

- 현재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인 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대상기업을 “벤처기업, 정규시장 퇴출기업”으로 확대
→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사항

■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

■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개편 방향에 공감

- 중소기업 전문 CB설립 등

■ 정책기조 강화를 위해 다음사항 개선 권고

- 부분보증비율 하향조정(85% → 50% 수준) 하여
 - 은행의 여신심사기능 강화
- 보증만기 연장기업에 고율의 수수료 부과하여
 - 중견기업에 의한 신용보증 독점현상 방지
- 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 은행과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통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외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도

- 중소기업 전문 CB설립 등

■ 현황

- 명시적인 규정 없이 중진공 지역본~~부~~별로 예산~~배~~정 운용 →
* 지방중소기업지원실적(%) : ('98) 53.5 ('00) 59.3 ('02) 60.1 ('04)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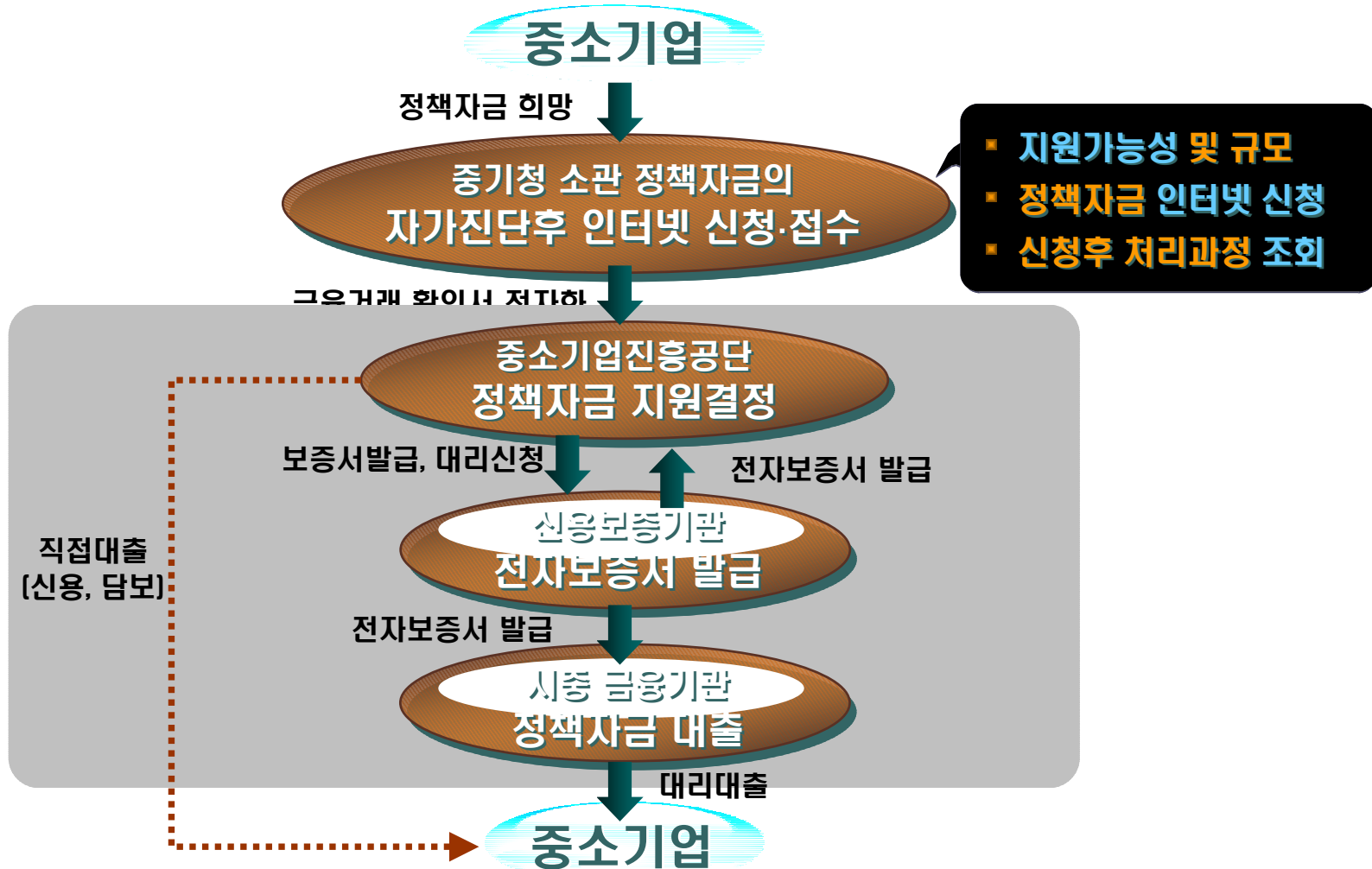
■ 운영방안

- 수도권이외 지역에 예산의 60% 배정
 - * 5인 이상 제조업 비중 : 수도권 57%, 비수도권 43%
 - * 금융기관 대출금 비중 : 수도권 67%, 비수도권 33%

■ 수도권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가점비중 확대(1점 → 3점)

One-Process 공급체계 구축

- 중소기업이 자금신청하면 인터넷망을 활용 최종 대출까지 일괄 연계 처리(보증서발급 전자화, 금융거래확인서 전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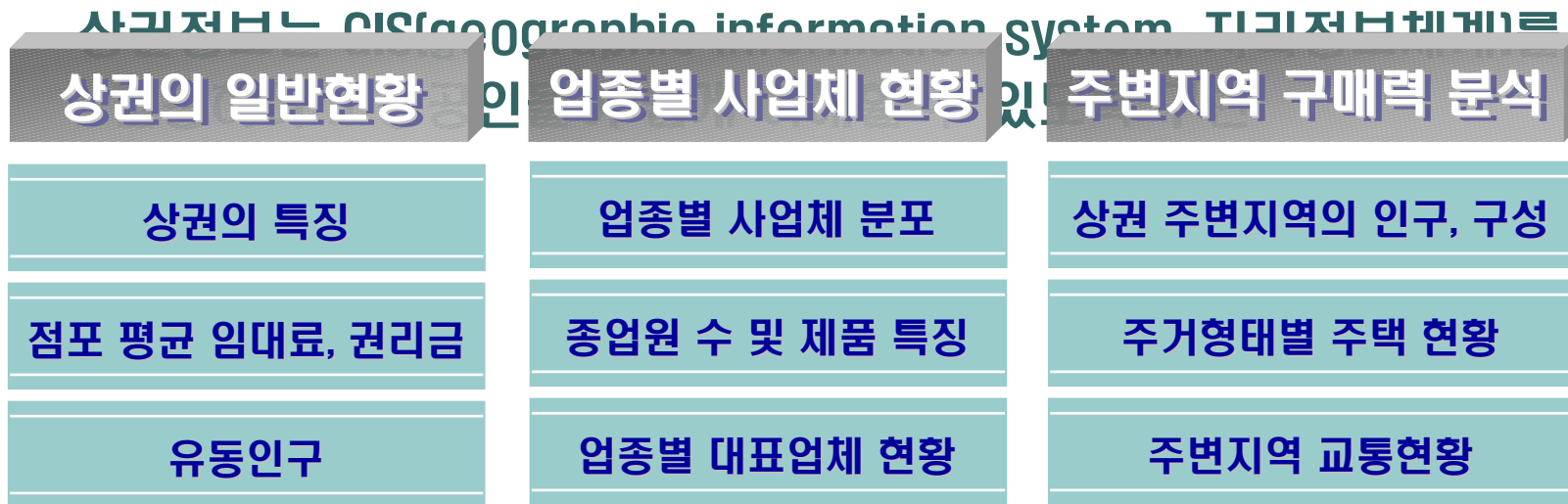


상권정보체제 구축 및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 개발

본문

정확하고 체계적인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합리적 업종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 업종배분 유도

- 다양한 상권정보를 활용해 특정 업종에 대한 수요·공급을 분석하여 수요대비 공급 수준을 지수화한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 개발



대형할인점 증가에 따른 재래시장 상권 위축

본문

대형할인점 증가추이

연 도	00	01	02	03	04
할 인 점 수	164	192	230	254	268
연 매 출(조원)	11	14	18	20	21

재래시장 현황

- 전국재래시장 : 1,695개(점포 23만개, 상인 30만명)
- 등록시장 매출액 : ('02년) 15조원 ('03년) 13.5조원
- 시설노후화률 : 시설불량 시장 54%, 주차장 부족시장 55%

창업자금과 자금지원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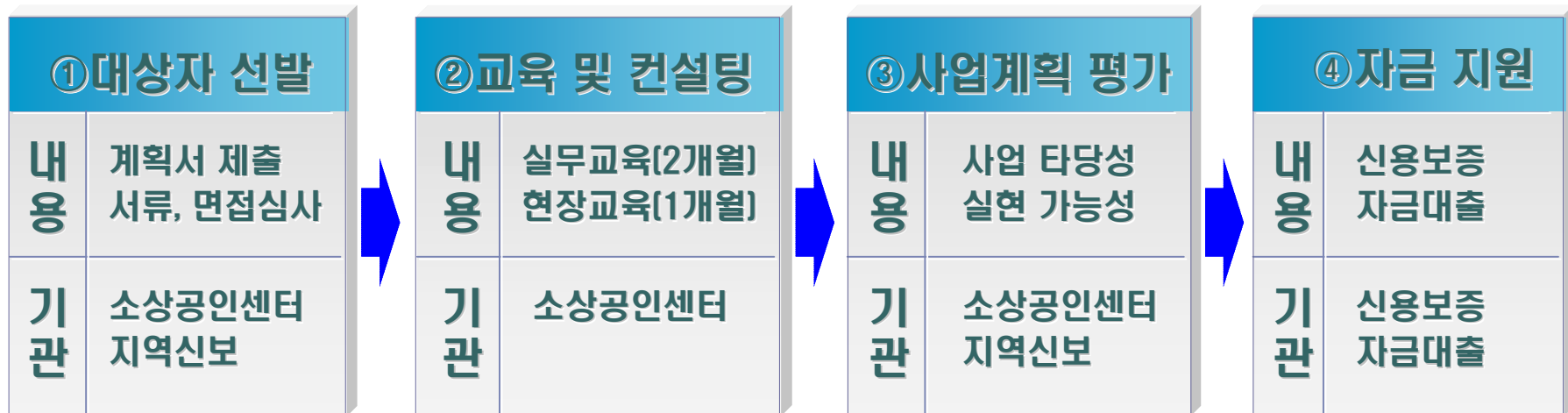


■ 2개월간 실무교육, 1개월간 현장경험 등 총 3개월 교육 후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자금지원 결정



Off-line 교육과 병행하여 e-Learning을 활용한 업종별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한 계획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량 결집



■ 온라인점포 분양(05~07년) : 총 18,000개

-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 디지털 상인을 육성
 - * 우수상품·지역특산품 온라인 거래(도·소매상, 소비자)
 - * 전국 재래시장을 링크하는 포털 사이트(세일행사·이벤트 안내 등)

■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등 상거래 현대화

- 재래시장의 신용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단말기 보급
-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지원(5억원)
- 전화주문·공동배송 콜센터 시범설치 확대(현재 2개)
- 대형시장·전문시장 전자상거래망 구축 지원(8억원)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강화('04년 4만개 → '07년 7만개)



■ 실태조사의 연차별 확대

	'99	'01	'03	'04	'05	'06	'07
조사대상업체 (천개)	3	25	35	40	50	60	70
[원사업자수]	[1]	[8]	[9]	[10]	[12]	[16]	[20]
[수급사업자수]	[2]	[17]	[26]	[30]	[38]	[44]	[50]

- 부당한 하도급단가 결정, 발주 취소, 반품, 감액 등 실태조사 확대
 - 추가공사·물가상승분에 대한 대금미지급, 부당감액 등 불공정 특약조항을 가진 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병행
- 조사불응·허위응답업체에 대한 확인조사 및 제재 강화

■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 운영('05.1.1부터)

- 상시 조사반 가동 및 직권현장조사 강화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및 개선 촉진

본문

■ 현재 사업자 등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권장 [하도급법 제3조의2]

● 현재 건설·섬유·조선업종 등 16개 분야에서 운용중

- * 16개 분야 :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건설자재, 조선, 전기,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음식료, 자기상표부착 제품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별점 감점) 부여

■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 제정, 개선 및 보급 확대



● 신규로 서비스업종(8개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 개선

- * 사업상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긴급발주시 납기지연에 따른

■ 사업 개요(CEIS : Content Export Information System)

● 내용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보 기업정보 온라인 제공
- 문화콘텐츠 수출입 절차, 서식, 무역상담 지원서비스 제공
- 온라인 콘텐츠전시관 구축 : 200여개 업체, 1,000여개 콘텐츠 전시
 - * 05년 490백만원 예산 반영(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관)

● 이용현황('04년말) : 일평균 2,130명 방문

■ 향후 운영 활성화방안

- 해외 전시회, 전문인력 풀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진출 지원
- 해외거점별(중국, 일본, 유럽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국어 제공 및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부처명 (규모순)			
중소기업청	9	30,249	64.2
산업자원부	15	4,776	10.1
정보통신부	4	3,494	7.4
문화관광부	7	3,502	7.4
노동부	4	1,226	2.6
농림부	6	1,073	2.3
환경부	2	950	2.0
과학기술부	1	810	1.7
해양수산부	4	445	0.9
건설교통부	2	330	0.7
여성부	1	100	0.2
국방부	2	74	0.1
특허청	1	20	0.04
합계	58	47,049	100.0

■ 개요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초기에 갖는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 무역거점에 수출 Incubator를 설치하고 사무공간 제공, 법률 및 마케팅 등 지원

■ 운영 현황 ('04. 12월말 현재)

- 주요 수출 거점에 9개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중
 - 130개 중소기업 입주 □ 활용 가능 (122개 업체 입주 중)
 - * 미국(워싱턴, LA, 시카고), 중국(북경, 광조우),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동경), 브라질(상파울루), 베트남(호치민)
- 수출실적 : '98~'04년까지 누계 4억 8,543만불, '04년 : 1억 5,365만불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경험이 있고,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국내외 민간 전문회사를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초기 해외진출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한 용역프로젝트에 대하여 적정 해외지원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해결을 지원

■ 지원성과

구 분	'01년	'02년	'03년	'04.12월말	총 계
수출액(백만원)	130,754	59,100	282,081	211,732	68,667
투자유치(백만원)	7,830	1,800	2,067	12	11,709
현지법인(지사)설립	30건	18건	17건	35건	100건
전시회(박람회)참가	77건	58건	150건	183건	468건
기술제휴등 MOU체결	52건	27건	19건	112건	210건

중소기업 기술인력 공급가능 규모



■ 공학계열 기준 : 연간 24만명

구분	대상	공급규모
기능직	공고	209개 학교, 6.7만명
중급기술직	전문대, 기능대	158개 학교, 7.7만명
고급기술직	산업대, 공과대	189개 학교, 9.4만명

중소제조업의 기술인력 부족현황('04)



■ 직능별 부족현황

구분	기능직	중급기술직	고급기술직	계
근무인력(천명)	544.7	234.7	69.3	845.6
부족인력(천명)	37.6	15.7	4.6	57.9
부족율(%)	6.5	6.3	6.3	6.4

■ 부족업체(중소제조업의 33%)

- 업종 : 기계·금속·화학 등 전통제조업
- 규모 : 50인 미만의 소기업, 성장단계기업

분야별 정비대상사업

본문

■ 경쟁력 강화 분야 정비대상사업 (26개)

-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수출금융, 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컨설팅, 중소기업유통지원, 해외 마케팅지원, 국내전시회지원, 무역인력양성,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중소기업IT화지원, 산업 정보화 기반구축 등

■ 창업·벤처 분야 정비대상사업(10개)

- 창업보육센터운영, 상담회사용역지원, 소기업 및 소호창업지원, 중소·벤처창업지원 대학정보통신창업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 벤처공동콜센터설치, MI창업성공 인프라구축,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엔젤투자시장구축

■ 소상공인 분야 정비대상사업(5개)

- 소상공인지원자금, 재래시장활성화, 시장재개발예탁금, 체인사업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 유사·중복 사업(53개 사업)

- 창업보육사업, 환경관련자금, 민군겸용기술개발, 정보화관련사업, 유통관련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고용장려금 등